

# “세워놔도 운행해도 불안” 차주들 불만 폭주

광주·전남 BMW 운행금지 첫날

1018대 안전진단 안받아 위험 주행 위반 땀 징역·벌금형 내용 모르는 차주들 불만 폭주 운행정지 실효성 의문 제기도



16일 오후 광주시 남구 BMW 서비스센터 인근에 리콜 대상차량들이 세워져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BMW 일부 차량에 대해 사상 초유의 운행금지명령이 내려진 16일 차량 소유자들 사이에선 불만이 터져나오는 등 혼란이 빚어졌다.

이미 점검을 마친 차량 소유자들도 화재 원인이 다양할 수 있다는 말이 퍼지면서 운행 여부를 주저하는 등 불안감을 호소했다.

광주·전남지역에서는 리콜대상 여부를 떠나 BMW차량 주변은 무조건 피하는 등 'BMW 포비아'도 확산하고 있다. 무책임하고 더디게 수습 대책이 추진되는 BMW 사태가 공포를 키우고 있는 것이다.

16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시에 등록된 BMW 리콜대상 차량 3058대 중 지난 15일 자정까지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안전진단 미이행 차량은 전체 차량의 13.6%인 647대로 집계됐다.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을 5개 자치구 별로 살펴보면 동구 23대, 서구 157대, 남구 53대, 북구 85대, 광산구 95대다.

전남 22개 시군에 등록된 리콜대상 차량은 모두 2706대로, 이 중 13.7%인 371대가 안전진단을 받지 않았다. 광주·전남에서 1018대의 BMW차량이 화재 위험을 안고 도로를 누비고 있는 것이다.

이날 국토교통부로부터 운행 정지 협조 요청 공문을 받은 광주시와 전남도는 곧바로 BMW 차량 소유자가 안전진단 전까지 차량을 운행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시·군·구에 요청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운행정지 명령권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다. 운행정지 명령 효력은 시·군·구가 보낸 운행정지명령서를 차량 소유자가 등기우편으로 받는 즉시 발생한다.

리콜대상 차량 소유자는 전국 BMW 서비스센터를 방문해 안전진단을 받고 운행해야 한다. 해당 차량은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운행이 제한된다. 차량 소유주는 운행정지명령서를 받고도 주행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BMW차량 소유자 중 상당수는 이 같은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운행정지효력도 차량 소유자가 등기우편을 받은 이후부터 발생하는 탓에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높다.

회사원 허일선(31·광주시 광산구)씨는 "운행정지 명령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리콜 대상 차량을 운전하고 다녀도 법적으로 제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최근 들어 습관적으로 BMW 차량을 피해 주차하거나, 주행중에는 차선을 변경하는 등 피해 다니고 있다"고 불안감을 호소했다.

광주의 한 자치구 관계자는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운행정지 명령서를 등기우편을 통해 발송한다"면서 "등기우편을 받

지 못한 주민이 있을 경우 문자 등을 통해 안전진단 내용을 전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안전 진단을 받은 BMW차량 소유자들도 불만과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리콜 대상인 BMW520d를 운행중인 박모(43·광주시 북구)씨는 "지난 주에 안전진단을 받긴 했지만, 불안한 마음에 가족조차 태우지 않고 혼자 출·퇴근용으로만 타고 있다"면서 "그나마 인론을 통해 안전 점검 후 화재가 발생할 경우 동급 신차로 변경해준다는 소식을 접하긴 했는데, 업체에선 제대로 된 설명조차 하지 않고 있다. 온갖 피해와 고통을 소비자에게 떠넘기고, 무시하는 BMW의 행태에 화가 치민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현희 기자 young@kwangju.co.kr

## 법원 “담양 메타프로방스 실시계획 재인가 처분 정당”

광주지법 행정1부 판결

행정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사업 승인 무효 판결이 난 담양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에 대한 담양군의 실시계획 재인가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하형국 부장판사)는 16일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 과정에서 토지를 수용당한 박모씨가 담양군을 상대로 낸 실시계획인가처분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박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담양군이 재지정)사업시행자가 국토계획법이 정하는 토지소유요건과 동의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밝혔다.

국토계획법에 따라 이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려면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사업의 시행자는 총 10만5000㎡ 사업 부지 가운데 3분의 2 이상인 7만5000㎡를 소유했으며, 토지 소유자 총 56명 중 43명의 동의를 얻었다.

공익성이 없다는 박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 사업으로 설치될 다양한 시설은 휴양에 중점을 두면서 오락까지도 즐길 수 있으므로 '휴양형 유원지'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가족 단위 여행객은

물론 다양한 연령과 성별의 여행객이 찾아올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담양군민과 주변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며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담양군은 지난해 7월 대법원의 사업 승인 무효 판결 이후 사업시행자를 다시 지정하고 토지수용 비율을 3분의 2 이상으로 높이는 등 행정 절차를 보완, 2개월만인 9월 실시계획인가를 다시 했다. 이에 박씨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사업 추진이 불법이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이 행정 절차를 보완해 다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이 정당하다고 담양군의 손을 들어주면서 사업이 재개될지 주목된다.

그러나 토지 소유자들이 이에 반발해 또다시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토지반환과 건축물 철거 소송도 잇따라 제기한 상태여서 사업 재개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분석이다.

한편 메타프로방스 사업은 담양군 등이 민간자본 등 587억원을 들여 1단계 전통 놀이마당, 3단계 농어촌테마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현재 공정률은 1단계 85%, 3단계 100%다. 2단계 상가, 음식점, 펜션은 이미 공사가 완료돼 운영 중이다. 2016년 7월 법원이 행정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공사를 중지해야 한다고 판결한 이후 2년 넘게 공사가 중지된 상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이용섭 전두환비서관 언급’ 김정호 변호사 사건 각하

광주지법은 16일 "지난 4월 이용섭 광주시장 예비후보 지지자로부터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고발 당한 김정호(46) 변호사 사건을 지난 14일 각하했다"고 밝혔다.

김정호는 "김 변호사가 지난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인들과 공유하는 SNS단체대화방에 올린 사진과 내용 중 전두환과 약속하는 사진 속 인물이 이용섭 후보자는 아니었지만, (김 변호사가) 그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허위라는 것을 알고도 게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특히 이용섭 후보자가 전두환 정권 시절 사정비서관실에서 행정관으로

1년 6개월간 근무한 것도 사실이며 여러 각하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은 지난 5월 23일 고발이 취해진 사건이지만, 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명예훼손건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두환 회고록' 소송을 이끌고 있는 김정호 변호사는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인들과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특정인이 전두환 전 대통령과 약속하고 있는 사진과 함께 "전두환의 청와대 사정수석비서관실에서 1년6개월이나 근무한 분이 유력한 광주시장 후보라는 사실이 안타깝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호남고속도로서 그랜저도 화재

BMW 차량에 이어 국산차에서도 화재가 이어지는 가운데 16일 새벽 고속도로를 달리던 그랜저 차량에서 불이 났다.

이날 새벽 2시 40분께 곡성군 호남고속도로 광주방면 46.7km 지점에서 A(35)씨가 몰던 그랜저IG 엔진룸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다.

A씨는 주행 중 엔진룸에서 연기가 나자 갓길에 차를 세웠고 이후 갑자기 불이 번진 것으로 전해졌다. 불은 엔진룸을 태우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30분만에 진화됐다. 불이 난 차량은 그랜저IG 2016년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올해 들어 발생한 BMW 차량 화재는 40여건에 이르며, 에쿠스, 아반떼, SM5 차량에 잇따라 불이 나는 등 최근 BMW와 국산 차를 가리지 않고 차량 화재가 잇따르고 있다. /곡성=김계중 기자 kjkim@

## 각박한 세상, 이런 어른도...

사고 유발 고교생 피해 걱정 80대 노인 홀로 앓다가 숨겨 경찰은 불구속 입건 조사

택시 문에 부딪힌 80대 노인이 사고를 유발한 고교생에게 피해를 줄까봐 가족들에게 사고 사실을 알리지 않고 혼자서 앓다가 결국 한달 만에 세상을 떠났다.

16일 북부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오전 8시께 광주시 북구 운암동 한 고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A(85)씨가 택시의 뒷좌석 출입문과 충돌해 넘어졌다. 택시 운전자 B(63)씨가 운전하던 차량에 탔던 C(16·고교 1년)군이 정차한 후 문을 여는 바람에 사고가 난 것이다.

이 사고로 A씨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증상을 입었다. A씨는 처음에 통증이 없어 가벼운 부상으로 여기고 집에서 파스만 붙였다. 하지만 통증이 점점 심해지자 A씨는 사고 발생 10일 만인 지난달 27일이 돼서야 병원을 찾았고 결국 치료를 받다 지난 13일 숨졌다.

입원 당시 A씨는 자녀들에게 "혼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넘어져 다쳤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자녀들 걱정을 하고 혹시나 사고를 유발한 고교생에게 피해가 갈까봐 거짓말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씨의 사고 사실은 출상 하루 전 장례식장에서 드러났다. 장례식장측은 A씨의 사망진단서에 사인(死因)이 '외상성 다발성 늑골 골절상'으로 기재돼 화장을 하기 위해서는 경찰 조사로 사망 경위가

규명돼야 한다고 유족들에게 요구했다.

유족의 신고로 조사에 나선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 C군의 전화번호가 저장된 사실을 수상히 여겨 수사한 끝에 교통사고 사실을 밝혀냈고 B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B씨는 경찰에서 "사고 당시 A씨가 '괜찮다'고 해 치료비 명목으로 현금 3만원을 주고 현장을 떠났다"며 "다음날 A씨에게 전화를 해 '이상 없다'는 답변을 듣고 경찰에 신고하거나 병원에 후송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B씨가 직접 A씨를 충격하진 않았지만, 도로교통법상 교통 위험을 일으키지 않도록 승객에게 주의를 줘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불구속 입건했다. 또 B씨가 A씨의 병원 후송과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은 점을 토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행소니)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김동희 기자 kimyh@kwangju.co.kr

## 맞았다 vs 안맞았다... 내기 당구 치다 주먹다짐한 50대들



○...술값내기 당구를 치다 공이 맞았는지 여부를 놓고 주먹다짐에 흥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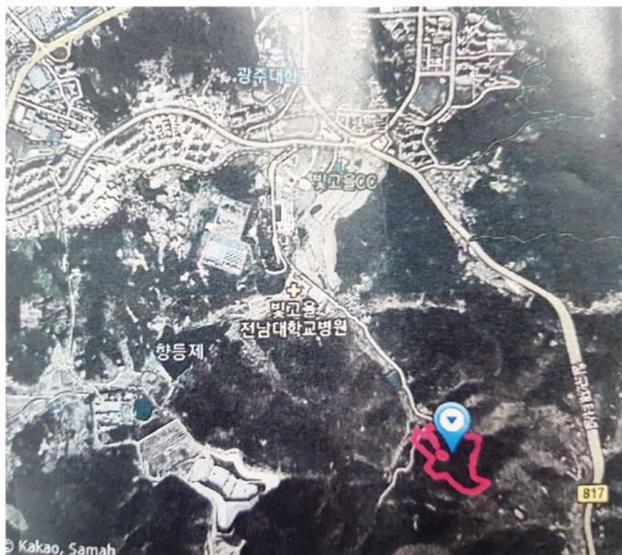
까지 휘두른 50대들이 나란히 경찰서행. ○...16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평소 가깝게 지내온 A(56)씨와 B(58)씨는 지난 15일 밤 10시 45분께 광주 북구의 한 당구장에서 내기 당구를 치던 중 공이 맞았는지(특점) 여부를 놓고 말싸

움 끝에 A씨가 B씨의 목살을 잡고 당구장을 끌고 다니며 폭행하자, B씨도 주먹을 휘두르고 당구장에 있는 흥기를 들어 A씨를 위협했다는 것.

○경찰 관계자는 "일단 이들을 불구속 입건한 뒤 귀가 조치했다"면서 "조만간 재소환해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동희 기자 kimyh@kwangju.co.kr

# 덕남동 임야, 투자가치 좋습니다.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산72번지
  - 임야 22600평중 나머지 550평  
공유지분, 원하는 평수만큼 매매가능 (200평 이상)
  - 도시지역, 자연녹지
  - 인접토지 맹지도 15만원에 매매 되고 있음(산64-21번지)
  - 매매 - 평당 17만원  
(일시불 완불시 조정가능)
- 문의. 010-6834-7400